美 하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안 일괄 처리

찬성 419·반대 3명 압도적
대북 원유·달러 봉쇄 초점
상원 표결·트럼프 서명 남아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를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미 의회는 상원 표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안과 묶어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의 경우 상원이 먼저 처리한 후 하원에 통과를 요구한 안건이어서, 상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새 러시아 제재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상원이 대북 제재 법안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의원 대부분이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 "북한, 내년 美 본토 타격 핵미사일 생산 가능"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 ICBM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북한이 미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 정보기관들의 기존 분석과 전망을 절반 이상 앞당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DIA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ICBM을 2018년의 어느 시점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WP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ICBM이 현재의 시험제작 원형 단계에서 내년까지 실제 생산 라인 단계로 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몇 달간의 적극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기초 설계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몇 달 내로 실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접어든 것으로 미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이는 이르면 내년 초에라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북한은 이르면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 ICBM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도록 마지막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앞서 CNN도 전날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번 주 내로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으며, 통상 발사 장비가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6일 안에 실제 발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WP는 "이번 분석 결과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기 전에 핵미사일 능력의 발전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미국과 아시아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자신이 연루된 사학스캔들 의혹 추궁을 위해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말바꾸기'에 싸늘해진 여론

사학스캔들 국회 답변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논란 끝에 24~25일 국회에 출석해 사학스캔들 의혹을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만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진지한 답변태도를 보였으나, 과거의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말바꾸기'라는 새로운 비판까지 받고 있다.

26일 일본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아베 총리가 25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을 바꾼 것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워, 국회 답변 이후의 싸늘한 반응을 전했다.

일본 야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학스캔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계획을 알게 된 시점이 올해 1월20일이라고 밝힌 점을 물고 늘어졌다.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은 뒤에야 알게 된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설명이었지만, 그와 관련해 지난 3월과 6월에는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에 야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결국 아베 총리는 "(과거의 발언에) 혼동이 있었다"고 사과해야 했다.

아베 총리는 이틀간 국회 출석에서 그동안의 고자세를 벗어나 "국민의 눈 높이에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겠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70%를 넘나들던 내각지지율이 사학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26%까지 떨어지자 자세를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국회 출석이 끝난 뒤인 25일 밤 일부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성심 성의껏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만족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 전문가들의 반응은 모두 싸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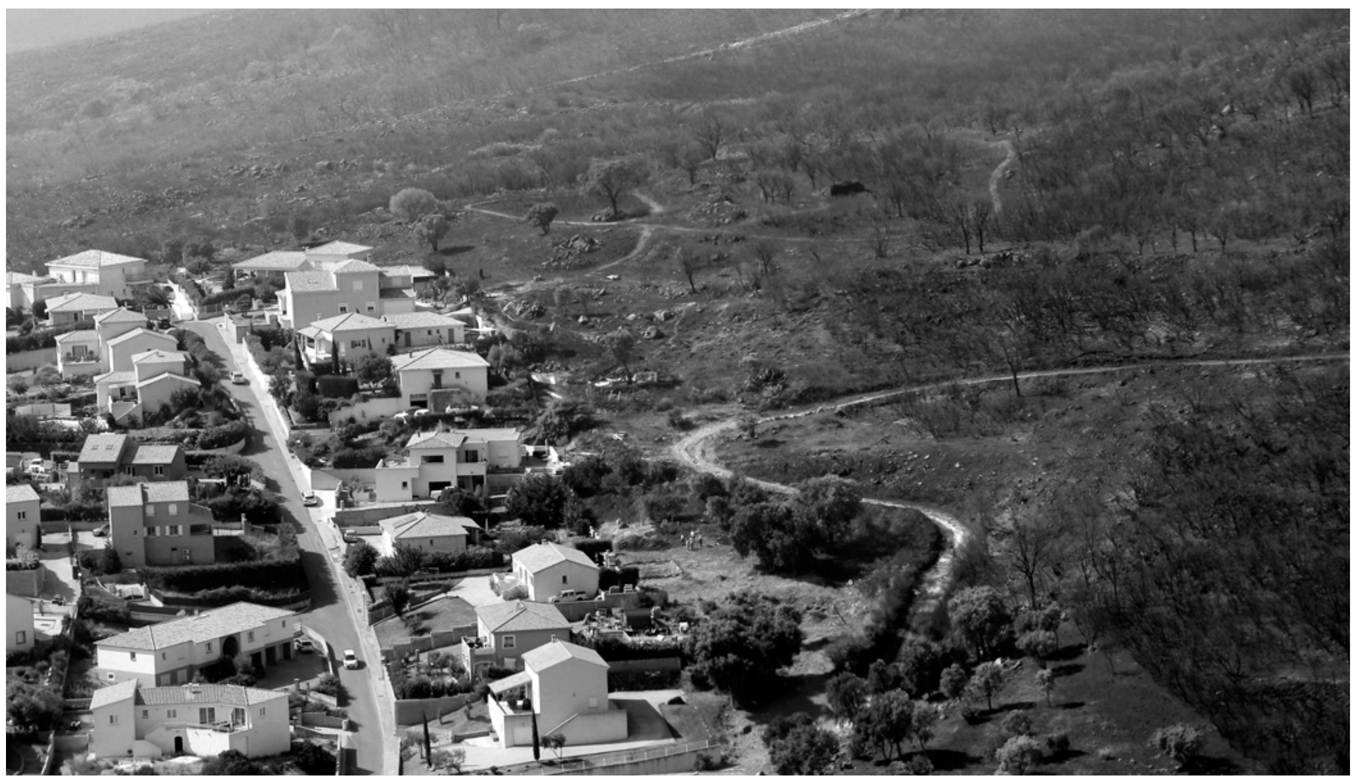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틀간의 국회 출석에서 '저(低)자세인 척'으로 일관했다며 말투는 정중했지만, 설득력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곳곳 큰 산불
연안풍 타고 휴양지 확산

프랑스 남부 지중해연안 지방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르몽드 등 프랑스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프랑스 남부 알프-마리팀과 바르 지역의 산불이 지중해 연안풍 '미스트랄'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프로방스-알프-코트 지방정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만 하루 만에 1500여 ha의 임야가 소실됐다.

화마는 유명 휴양지들도 차례차례 위협하고 있다. 지중해연안 코트다쥐르 지방의 마르세유와 칸 사이 바르 주(州) 곳곳과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여름 휴가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소방당국은 이른바 '마른 뇌우'가 산불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화마가 비켜 간 마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지방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코르시카 섬에서 난 불로 마을과 인접한 산이 폐허로 변했다. /연합뉴스

재미 한인 행사 '친한파' 의원 17명 참석

재미 한인 동포들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DC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영향력을 드러내고 한인 정치인과 로비스트를 육성하는 행사를 열었다.

특히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한인의 정치적 요구를 전달하는 '집단 로비'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더는 '정치적 소수'가 아님을 과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인 풀뿌리대회'(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를 통해서다.

재미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센터(KACE)'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주 전역에서 모인 참석자 600여명 가운데 80여명이 오전에 조를 나눠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재미 한인의 애로 사항과 요구를 전달하고 협조를 약속받았다.

특히 오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본행사에는 이들이 만난 의원들 중 무려 17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해 한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한국 관련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의정 활동을 다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을 비롯해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플로리다), 테드 포(캘리포니아·이상 공화) 의원 등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행사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과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이민 제도의 취약점, 중소 자영업의 제도 보완 등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